

회사는 표적·부당 징계 철회하라 !

조합원에 대한 표적 중징계와 부당전보 철회해야

회사가 결국 조합원 2명에게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보도국 기자 조합원 2명을 지역으로 부당전보했다. 본사를 능가하는 패악질이다.

최근 노사협의회 이후 악화된 노사 관계에 대한 보복 차원의 의도된 징계다. 특히 이교선 보도민실위간사는 지난 2월에도 전국MBC기자회 SNS 동영상 참여로 전국 최초로 징계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회사의 표적 징계로 의심된다. 또 주말 앵커인 이교선 기사를 흥성으로, 안준철 기사를 천안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전보 발령했다. 이는 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다.

노동조합 탄압하는 보도국장은 사퇴해야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보도국장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보도국장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했던 보도민실위간사에게 조합원이기전에 보도국 직원이라며 회사의 입장에 서지 않았음을 질책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8일과 19일, 회사와 보도국장은 노조를 비난하는 반박 성명을 냈다. 또 보도국장의 성명이 게시된 당일, 회사는 조합 집행부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공문을 보냈다.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이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사 상생을 외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들을 탄압하려는 도발에 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교선 보도민실위간사는 주말 앵커와 정치를 담당하며 대선 취재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 기자들은 취재와 리포트 제작을 마치면 통상 1시간 안팎 늦은 퇴근을 당연시하며 시차근무제에 준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2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수당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보도국장은 지

난 3년간 출근부를 작성해 기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기자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가. 타 언론사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제작 자율성 보장하고 부실 징계 철회하라

이승섭 조합원의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과 무단결근은 예견된 사고였다. 다큐 제작 계획을 보도국장에게 최종 보고했을 당시 1부작으로 확정됐었다. 그런데 갑자기 2부작으로 변경됐다.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 회사 측 주장처럼 외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완성도가 중요하다면 당초 기획대로 1부작으로 제작했어야 맞다. 그러나 회사는 2부작으로 무리하게 강행해 담당 기자는 예산상의 한계로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없는 외주 제작사와 함께 해야 했다. 또 프로그램 품질 저하를 우려해 경험 있는 내부 카메라 기자와의 제작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보도국장은 우리 회사에 카메라 "기자는 없다"는 폭언으로 묵살했다. 방송 제작이 파행을 겪은 뒤에야 부랴부랴 자체 카메라 기자에게 편집에 대한 조언과 수정 협조를 요청하라는 보도국장의 지시를 보면, 방송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자명하다. 담당 기자의 제작 자율성이 보장됐더라면 방송 지연은 없었을 것이다.

시사회 전후 수정 과정에서 기자는 보도국장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견디다 끝내 무단결근이란 독배를 선택했다. tvN PD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또 보도국 보직자들이 경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위서를 여러 차례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80년대 공안 검사가 운동권 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던 모습과 흡사하여 충격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구태다. 회사는 사건의 본질과 원인은 무시한채 담당 기자에겐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보도국장과 취재부장 에겐 주의각서와 근신 3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인사위원회에 함께 회부될 때부터 물타기가 예견됐지만 그래도 회사의 양심을 믿어보려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후배 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선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장과 면담도 요청하고 노사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회사는 초지일관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조합원에 대한 표적·부당 징계로 응답했다. 노동조합과 진정 상생을 원한다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전보 인사

를 즉각 철회하라. 또 한때 조합 선배였던 인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이진숙
사장과 함께 부역자가 될것인지, 아니면 후배들의 존경받는 선배로 남을 것
인지 선택하기 바란다. 마지막 경고이다. 이제 더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